

# 성범죄물 소지·구매해도 처벌 강화... 독립몰수제 도입

## 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심의·확정

### 성범죄물 제작 공소시효 폐지... 광고도 처벌

###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잠입수사 도입

### 24시간 피해자 지원 가동... 사업자 책임 강화

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범죄물 소지·구매까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전이라도 몰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 범위를 불법 촬영물, 합성·편집물, 협박·강요·그루밍 등에 의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으로 확장했다.

이와 함께 4대 추진전략으로 ▲무관용 원칙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처벌·보호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하고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 ◇성범죄물 제작 처벌 강화... 독립몰수제 도입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을 중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 형량을 상향할 계획이다. 제작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는 형량 하한을 설정하고, 성착취물

광고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 범죄로 취급해 준비나 모의만 하고 실제 범행까지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한다.

검찰은 사건 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강화해 시행 중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소나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수사단계에서 가해자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신상공개 대상도 기존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에서 성착취물 제작·판매로 확대한다.

### ◇이정 성착취물 소지 처벌 강화...

성인 대상 소지도 새로 처벌 성착취물 소지자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를 신설해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인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미성년자나 군장병이 연루된 점을 고려해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할 방침이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할 계획이다.

###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잠입수사 도입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길들인 뒤 동의를 강요해 가장해 성적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은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또 마약 수사 등에 활용하는 잠입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해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적발할 방침이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등을 고려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착수한다.

디지털 성범죄물 적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피신고자가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할 방침이다.

### ◇삭제 지원 24시간 가동...인터넷사업자 징벌적 과징금제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성 매수 대상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 피의자로 취급돼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점을 막기 위해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을 '피해자'로 변경해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24시간 가동해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2·3차 유포 추적 삭제 지원 등을 할 방침이다.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하는 절차를 '선 삭제, 후 심의'로 변경해 신속한 삭제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 디지털 성범죄 지능 필터링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인터넷 사업자 책임도 강화된다. 사업자가 즉시 삭제해야 하는 성범죄물 대상을 기존 불법 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한다.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도 웹하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고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간도 3개월에서 3주 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여성계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64.3%

리얼미터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수준에 근접했다. 4·15 총선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양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0~22일 서울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4월 4주차 주중 잠정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4.6%)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3%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32%(매우 잘못 18.5%·잘못하는 편 13.4%)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3%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6%포인트 급상승해 60%대에 진입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60%대에 진입한 것은 2018년 10월 3주차(60.4%) 이후 1년 6개월 여만이다.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최고치였던 9월 4주차(65.3%) 결과에도 1%포인트 차로 근접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계속 줄어 금·부정간 격차는 32.3%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금·부정간 격차가 30%대로 벌어진 것도 '포스트 평양' 국면이던 2018년 10월 2주차(금정 61.9%·부정 31.4%) 이후 처음이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당정 “유죄판결 전 성범죄수익 몰수”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20대 국회서 조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발의하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백 단장에 따르면, 당정은 독립몰수제 도입 이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소지·광고·구매 행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연령 상향 ▲대상소년의 피해자 규정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

범죄 유통방지 의무 강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백 단장은 “당은 n번방 재발방비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 조사 누가 막았나?’

### 사회적참사 특조위 ‘수사요청서’ 검찰 전달

### “1기 특조위의 대통령 행적 조사 진행 방해

### 진상규명국장 임명 막고 인원도 안 뽑았다”

### 요청서 본문에 ‘박근혜 수사 필요’ 내용도 담겨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 23일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전날 특조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당시 청와대와 10개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요청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중앙지검에 세월호 참사 당시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1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하는

요청서는 공문 형태 요청서”라면서 “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특조위가 확보한 자료는 검찰 세월호 특수단에 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구체적으로 ▲당시 비서실장(이병기·이하 ‘당시 생략’) ▲인사수석비서관(정진철 외 2명) ▲정무수석비서관(현기환) ▲정책조정수석비서관(현정택) ▲경제수석비서관(안중범 외 2명) ▲인사혁신처장, 차장, 국장 등 고위공무원과 소속 공무원 등 총 8명 ▲해양수산부 차장과 차관 등 총 19명을 수사대상으로 지목했다.

특조위는 당시 해당 사안에 관여한 것으로 본 정부 부처인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

감사원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10곳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달았다.

특조위는 2015년 10월 20일 세월호 1기 특조위가 소위원회 의결을 통해 ‘참사 당일 VIP(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 조사를 다뤄야 할 사건으로 의결하자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인사가 나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명과 공무원 파견을 막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 10개 부처도 이런 지시에 따라 특조위에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접수된 수사요청서 본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의 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인지한 정황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 방송 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